

대륙붕 경계획정 과정에서의 형평원칙 분석

- 쑨샤오저(孙晓哲)¹⁾

개요 : 1982년 국제연합해양법협약이 대륙붕 경계획정 문제에서 통일성 있는 법률 표준이 되지 못하고, 경제 글로벌화로 인해 육지의 자원이 점점 고갈되는 상황에서 블루엔클로저 운동을 벌이며 해양경쟁은 나날이 치열해져 각종 이익들의 충돌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륙붕 권리의 합법적 이행에 대한 법률적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대륙붕 경계획정의 법률적 실천에서 어떻게 협약(국제연합 해양법 협약)을 적용해야 할지가 국제 해양법 이론 연구의 주요 이슈이다.

1. 형평원칙의 법정 의미 및 활용 기준

국제사법재판소의 대륙붕 경계획정 사례 중 1909년 스웨덴-노르웨이의 그리스바다르나(grisbadarna)사건에서 형평원칙이 처음 언급이 되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수직선을 그어 당사국이 만족할 만한 법적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이 형평 원칙 활용의 시초였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 판결에서 국제사법재판소가 처음으로 형평원칙을 적용하여 전체 사안을 고려하였는데 이는 대륙붕 경계획정 법률실천에 처음으로 형평원칙을 적용한 사례이다. 1982년 협약 제83조는 당사국 대륙붕의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의 법률의 틀 안에서 쌍방이 필요한 서면협상을 해야 형평을 이루는 만족스러운 법률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법률의 측면에서 국제 조약의 형식으로 이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한 것이다. 형평원칙은 국제사법실천에서 그 지위와 역할이 끊임없이 확립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평원칙의 법적 의미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 기준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인가? 협약이나 국제사법실천에 규범적인 문서로 이를 명시하지 않았기에 우리는 국제법과 중재안을 통해 형평 원칙의 세 가지 의미를 종합해 볼 수 있다.

당사국간의 우호적인 협상과 일치가 분쟁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한 전제인데 이는 협약 제83조에 규정되어 있고 국제연합 헌장에도 부합한다. 1984년 메인만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당사국은 법률 심리를 신청할 때 우호적인 협상은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라고 더 명확히 설명하였다.

또한 경계획정의 공정성 결과에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지리와 인문적 요인을 충분히

1) 중국해양대학 법학대학원교수

고려하여야 한다.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북해 대륙붕의 특수한 지리와 인문적 요인을 고려해 공정하게 판결했다.

형평성 있는 결과는 이론과 경계획정 이행에서의 최종적인 가치이념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1982년 튀니지-리비아 사건에서 형평 원칙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으며 대륙붕 경계 문제의 중심적인 부분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면 형평한 결과를 위한 법적 기준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국제조약도 명시하지 않았고 국제법 사례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안에 대한 공정한 결과가 사안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제사법재판소는 획정 결과의 공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비례 원칙을 도입하고 수학적인 비례의 방법으로 획정의 공정 여부를 평가하였다.

2. 형평원칙과 기타 경계획정 방법의 대조 분석

대륙붕에 대한 협약은 어떤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협약은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제해양법의 이론과 실천에는 우호협상 원칙, 등거리(중간선) 원칙, 대륙붕 자연연장 원칙, 비례 조정 원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형평 원칙과 상술한 몇 가지의 원칙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여 형평 원칙과 그 사이의 이론 관계를 밝혀보도록 하겠다.

① 우호 협상 원칙

협약 제83조는 대륙붕의 경계획정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38조가 요구하는 내용 안에서 당사국 쌍방의 서면 합의를 참고로 공평하게 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여러 원칙을 제시했는데 사실 이런 제안은 법률적 근거가 되지 않는다. 제83조는 평화롭고 형평을 이루는 대륙붕 경계획정의 원만한 해결에 있다. 제83조를 우호적인 협상원칙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이론적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협약의 공정원칙이 대륙붕의 일반원칙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② 등거리(중간선) 원칙

이 원칙을 1958년 대륙붕협약에서 나온 개념이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 이 원칙을 국제조약에 규정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법률적 원칙은 아니다. 해양법 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법률적 효력을 확실히 정하지 않아 우선 참고사항이 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해양경계획정의 한 방법으로서 구체적인 적용 과정에서 200해리 거리의 참고적인 방법으로서 병용되어 사용된다.

③ 대륙붕 자연적 연장 원칙

이 원칙은 협약이 법적으로 확정한 대륙붕 경계획정의 권리 기반으로서 1969년 북해 대륙붕 사건에서 처음 적용됐다. 협약 제76조는 자연연장 원칙과 200해리까지의 거리라는 두 가지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국제법 적용 사례에서 대륙붕 경계의 자연

적 연장 원칙의 역할이 갈수록 줄어들고 권리기반은 자연적 연장과 200해리까지의 거리라는 두 가지 법적 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그러나 자연적 연장은 여전히 연해국이 해양원칙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는 주된 법적 근거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²⁾이다.

④ 비례의 원칙

이 원칙은 해안선 길이와 경계획정으로 얻은 해당 해역 사이의 비율 관계를 수학적 비율 환산 방식을 적용해 경계획정 결과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예측 범위 안에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다. 비례 원칙은 1969년 처음 도입돼 이후 국제사법 관행에서 꾸준히 적용됐지만 경계획정의 형평성 있는 결과는 경계획정에서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데 달려 있다. 이상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이러한 각 원칙은 형평을 실현하는 방법의 하나이자 형평한 결과를 검증하기 위한 고려 기준이 된다.

3. 다차원적인 경계획정 이론 체계의 구축

형평원칙은 대륙붕 경계획정의 보편적인 적용 규칙이다. 이러한 형평원칙의 다층적인 이론적 시스템을 세운다면 표준화된 법률규칙이 될 것이며 참고할 가치가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대륙붕 경계획정에 법률적 근거를 제공해 주며 동시에 형평원칙의 과도한 융통성을 제한해 줄 것이다. 또한 형평 원칙의 법률적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여 줄 것이다. 형평원칙의 명확한 이론은 법률이론 측면에서 만들어 질 수 있다.

-비법률화 방식 : 국가 간의 우호 협상타결(우선 고려)

-법률방식 : 국제사법재판소에 국제법 시스템과 틀 안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것.

자연적 연장 원칙이 전제라는 것을 인정한다. → 등거리선은 필요시 적용하고 반드시 적용하지는 않는다. → 일체의 관련 사정을 고려한다.(지리적 요소, 섬의 효력, 해안 사업, 자연자원의 평등 이용 등)

-경계획정 결과의 형평성 : 비례의 원칙을 통한 검증 및 교정

이런 다층적 시스템 구축의 1차 목적은 분쟁의 비소송화를 위함이다. 두 번째 목적은 대륙붕 경계 분쟁이 우호적인 협상 분위기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제소국은 협약의 강제 절차에 따라 2차 절차에 따라 획정방법을 적용한 뒤 비례적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점검한다.

4. 형평원칙하의 다층적 해역 분쟁 경계획정 시스템의 새로운 추세 : 흑해 대륙붕 경계 획정 사례를 중심으로

2004년 9월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은 흑해대

2) 위안구지에(袁古洁). 대륙붕 경계획정문제에 대한 고찰[J]. 中外法学, 1998, (5).

륙붕 경계확정 문제에 대해 6년간 양국이 충분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한 사례이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측이 비준한 2003년 국가경계제도조약(国家边界制度条约) 제1조의 규정에 따라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분쟁에 대해 법률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대해서 상세히 그 경과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비법률화 방식을 살펴보면, 비법률화 방식은 평화적 방식의 협상 타결로 국가 간에는 협상이 이뤄진다. 루마니아는 법원 판결 근거로 ‘교환각서’ 제 4(h) 규정을 인용하여 재판소의 관할권을 구하고자 하였다. 즉 분쟁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측 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환각서를 인용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법률방식이다. 국제사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하면 대륙붕 문제는 국제법 시스템 내에서 국제법 절차를 통해 효과적으로 해결되게 된다. 자연적 연장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칼르기니츠카 만이 해안을 이루고 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해양 경계확정에서 자연적 연장 원칙의 기초적인 권위를 반영한다. 이후 국제사법재판소는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인접 해안 사이의 잠정 등거리선의 기선을 확정하고 잠정 등거리선을 설정했다. 이어 국제사법재판소는 국제해역과 대륙붕 경계확정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경계확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적·인문적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세르팡섬(뱀섬)³⁾에 완전한 효력을 부여하지 않았으며 세르팡 섬은 우크라이나의 해안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섬이 향유할 수 있는 12해리만 가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상황을 보면 세르팡 섬의 수리나 제방이 항만 활동에 직접 사용됐다는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수리나 제방이 바다를 향해 있는 것이 잠정 등거리선의 적정 기점이라고 보지 않았다. 이번 사건의 판결은 국제사법재판소가 각 해안의 대략적인 방향에 근거해 현저한 비례의 불균형이 없도록 내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흑해 해양경계 확정안을 분석해보면 국가 간 우호 협상이 문제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이론적 추세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대륙붕의 경계확정은 법절차를 적용해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흑해 해양경계 확정안에서 자연적 연장 원칙의 활용은 본안에서 판별할 수 없다. 그 원칙적 지위의 약화는 역대 대륙붕 경계안에서 나타난다. 협약에서 말하는 등거리 원칙은 자연연장 원칙과 결합되는 추세지만 비례 검증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⁴⁾은 부정할 수 없다.

3) 우크라이나의 섬. 본 도서는 고조시 수면 상에 있으며 그 면적이 0.17km²이고 둘레는 약 2,000m이다. 2009년 국제사법재판소는 2009년 제9번 안전판결(decision No. 912009)에 의거하여 세르팡섬 평균 수심 50m 이상의 9,700km²에 해당하는 79.34%의 해저지면을 루마니아에 그리고 평균수심 50m 이하의 2,300km²에 해당하는 20.26%의 해저지면을 우크라이나에게 할당했다. 또한 세르팡섬 자체는 우크라이나의 부속도서로 남아 12해리의 수역을 가지게 되었다.

4) 국제사법재판소, 흑해경계확정판결문[EB/OL]. <http://wenku.baidu.com/view/355b53768e9951e79b89272d.html>

5. 국제적인 차원의 동중국해 문제 해결 방법

흑해 경계획정안은 형평 원칙 체계의 최근 흐름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의 상황은 더 많은 해양경계획정과 관련된 판결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해양 지질 구조를 감안하면서 어떤 식으로 법 이론을 운용하여 중-일 동중국해 대륙붕 경계획정을 할 수 있을까? 우선 주요 법률 원칙으로 자연연장 원칙을 선택하여 중-일 대륙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선 1969년의 판결로 자연적 연장 원칙의 법률적 지위는 무시할 수 없는 주체적 지위가 되었고 주요한 획정 원칙이 되었다. 반면 200해리 거리 기준은 자연적 연장 원칙보다 적용 사례가 적다.

둘째, 경계획정 과정에서 중-일 양국의 해양 지질 상황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은 항상 객관적·지리적 상황을 존중해왔다. 중국은 과학적인 지리 연구에 근거해 오키나와 해구의 해저는 대륙 지각에서 해양 지각으로의 향하는 전이대(transition zone)이며 해양지리 구조상 오키나와 해구가 중일 대륙붕의 지리적 경계선이라는 것은 지리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 도서의 지위를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협약 제 121조 규정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다오위다오가 경계획정 과정에서 충분한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정론임을 알 수 있는데 이에 근거해 다오위다오와 그 부속도서의 해양경계 획정과정에서의 역할은 다루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형평 원칙 체계의 요구에 부합하는 비례 원칙을 적용하여 경계획정의 형평성을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중-일 해역에 중간선을 그으면 경계획정 이후 해역 면적비율이 0.92 대 1로 이는 해양지리의 특성에 맞지 않고 형평한 결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가치에도 현저히 어긋난다⁵⁾.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협약의 법률적 틀 안에서 국제해양법 이론의 요구에 맞춰 형평원칙의 역사적 연원과 법률적 의미를 밝히고 흑해 대륙붕 경계안에서부터 다층적 형평 원칙 시스템의 이론과 실제 흐름을 파악해 중-일 대륙붕 분쟁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5) 지아위(贾宇).중국 동중국해 200해리 외 대륙붕의 법률 문제 초보적인 연구 [J].중국해양법학평론,2006